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이 정책수요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변 영 주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이 정책수요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고 길 곤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변 영 주

변영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이 석 원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전 소 희 _____ (인)

위 원 _____ 고 길 곤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복지수급 여부 및 종류가 정책대상집단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재정패널 9차년도(2016년) 및 13차년도(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속 5개년도 설문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패널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추정모델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test 및 Hausman test를 수행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 대상인 복지태도는 크게 복지체감정도,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복지 증세부담 수용의사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각 개념을 구체화 시켜 총 8가지의 변수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하는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다. 특히 출산관련지원금의 경우, 수급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의 방향성이 타 급여의 경우와 반대 방향이었다. 본 연구는 복지급여 수급 여부 및 종류와 복지태도의 관계를 여러 시점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복지태도, 복지의식, 패널분석, 재정패널조사
학 번 : 2021-27300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제 1 절 복지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
1. 복지국가의 역할 ····· 4
2. 사회복지제도의 개념 ····· 5
제 2 절 복지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6
1. 복지태도의 개념 ····· 6
2.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 8
3. 복지태도와 복지수혜성 간의 관계 ····· 10

제 3 장 연구 설계 ····· 12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틀 ····· 12
제 2 절 주요 변수의 설정 및 데이터 ····· 14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4
2. 종속변수 ····· 15
3. 독립변수 ····· 17
4. 통제변수 ····· 19
5. 변수의 요약 ····· 21
제 3 절 연구방법 ····· 23

제 4 장 분석 결과 ····· 26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26
1. 연도별 기초통계 ····· 26

2. 종속변수 ····· 29
3. 독립변수 ····· 30
4. 통제변수 ····· 32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 33
제 3 절 패널회귀분석 ····· 36
1. 복지체감도 ····· 36
2.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 39
3. 정부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 39
4. 복지증세부담 수용의사 ····· 42

제 5 장 결론 ····· 44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44
제 2 절 연구의 함의 ····· 46
제 3 절 연구의 한계 ····· 47

참고문헌 ····· 49

표 목 차

[표 1] 연구문제 ····· 12
[표 2] 연구가설의 설정 ····· 14
[표 3] 9~13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 및 가구원 수 ····· 15
[표 4] 복지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 16
[표 5] 종속변수의 측정 ····· 17
[표 6] 독립변수의 측정 ····· 18
[표 7] 통제변수의 측정 ····· 21
[표 8] 변수의 속성 ····· 21
[표 9]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초통계 ····· 27
[표 10] 종속변수 기초통계 ····· 29
[표 11] 독립변수 기초통계 ····· 30
[표 12] 복지급여별 수급자 특성 ····· 31
[표 13] 통제변수 기초통계 ····· 32
[표 14]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 34
[표 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 35
[표 16] 복지체감도 분석 결과 ····· 38
[표 17]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39
[표 18] 정부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41
[표 19] 복지재정부담 태도 분석 결과 ····· 42
[표 20] 패널분석 결과 요약 ····· 45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 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정부 복지지출의 목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복지확대의 정책기조에 따라 무상급식,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들을 펴왔다. 이러한 기조에 더하여 감염병 사태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전국 기준 2010년 26.3%에서 2020년 40.9%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예산 제약 하에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결국 경제·산업발전 및 사회간접자본 등 다른 분야의 재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금종예 외, 2017), 복지지출이 정책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복지지출 중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복지급여 및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금이 수급 대상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요 원천이며, 동시에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국내외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이민호, 2021). 특히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의 복지태도는 복지지출이 정책수요자의 '행태'뿐만 아니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한 사람이 공공복지의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안상훈, 2009).

본 연구는 Taylor-Gooby(1985)의 정의에 따라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복지비용,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또는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 규정하였으며 이는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지출비율이 높을수록 복지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하였지만(Dallinger, 2010; Toikko & Rantanen, 2015),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평가들이 제시되어(김수완, 2011; Koster, 2013; Jaime-Castillo et al., 2016) 일반화된 결론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 복지제도 수급의 효과에 따라서도 상반된 결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복지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여전히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한국사회 에서 아직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한 만큼 복지영역들에 대한 계층적·이념적 또는 자기이해에 관련한 명확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허수연 외, 2016).

한편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복지인식 혹은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배화숙, 2021), 이러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복지제도 수급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결혼지위, 연령 등의 미시적 특성 변수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거시적 특성의 변수들이 영역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민호, 2021; 손병돈, 2016 등).

이 연구는 복지제도 수급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이슈보다 실제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복지영역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

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윤태・서재욱, 2014). 그러나 아직까지 개별 복지영역에서 수급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복지급여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수급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복지태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복지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이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하거나 분절적인 2~3개년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복지태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속적인 기간을 두고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측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표본 유지율이 70% 이상이며 연속 5개년의 인식조사를 수행한 재정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기간에 걸친 동일한 표본의 복지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측정한 다양한 연구들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포괄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급여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독립변수 중 하나로써 수급 여부에 따른 차이만을 본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여 수급하는 복지급여의 종류를 독립변수로 보고 타 변수들을 통제하여 수급의 직접적인 대상자의 복지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과 복지태도 간 관계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할 이론적 쟁점들을 반영하여 복지급여 수급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연속적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복지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복지국가의 역할

정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은 정치학 및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핵심 주제로 논의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의에서부터 정부개입의 정당성, 정부의 규모 등까지 다양한 맥락으로 논의가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작은정부를 지지하는 고전학파와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학파의 치열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작은정부를 지지하는 고전적 논의는 대표적으로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최소정부관이 있다. 이 관점은 개인의 정보우월성 및 사익추구의 우월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성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사익의 조정 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사익을 조화시켜 공공선으로 결집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최소정부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를 폭력과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와 사회 내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들의 불공정한 행위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논의들도 있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a)공공재 b)외부성 c)자연독점 d)불완전정보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 또한 국가의 역할로 보면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표적인 예로 Keynes(1936)는 대공황 이후 경제불황

기를 고전학파와 달리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부지출 역시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용된다(R.Musgrave, 1959). 정부지출의 주요재원은 민간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정부의 지출은 당위성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지출의 당위성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 후생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분배상태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소득재분배가 복지국가의 핵심 역할임에는 이견이 없다.

2. 사회복지제도의 개념

복지국가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그 내적 구조와 정책의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Gough & Sharkh, 2011).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감소 등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이지만(권혁주 외, 2012), 개별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직간접적 목적 역시 정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보아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실업 등 특정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분산함으로써 개인 및 가구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며(김효정, 2015),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여원칙에 기초해 있다. 반면, 공공부조는 시장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가난한 사람이면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여러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자기기여가 전제되므로 재분배의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애당초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도록 방임해 두었을 경우 무방비상태로 노령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때 해당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재분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부조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데 비해, 범주적 공공부조는 소득수준 이외의 추가적 기준을 적용해 그 범주에 드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범주적 공공부조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수혜대상의 기준이 되는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부조의 경우 재분배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나 혜택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지가 중요한 선택사항이다. 프로그램의 방만한 운영은 사람들에게 '실패할 유인(incentive to fail)'을 제공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Murray, 1984).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갖는 일차적 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수직적 혹은 수평적 재분배를 유발한다(김효정, 2015).

제 2 절 복지태도(welfare attitude)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복지태도의 개념

복지국가의 발전 및 축소와 관련해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이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김사

현, 2012). 시민들의 복지태도는 이러한 국가복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허수연 외, 2016).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친복지적 태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류진석, 2004).

그 결과 구성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나 태도, 혹은 인식의 구조적 특성들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노대명 외, 2011).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용어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 복지태도(welfare attitude),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 복지요구(social welfare demand), 복지에 대한 지지(support for social welfare), 여론(public opinion) 등과 같은 용어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 이러한 용어를 면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문헌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선호, 또는 비용부담의 주체 및 방식, 수혜대상과 같은 사회복지 전반과 관련한 개인의 입장 또는 인식 등을 가리킨다(이민호, 2021).

Taylor-Gooby(1985)는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복지비용,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또는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로 정의내린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행동양상을 포괄적으로 ‘복지태도’로 표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용어의 사용뿐 아니라 복지태도를 어떻게 개념화 및 조작화하여 사용하는지 역시 연구마다 편차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배경요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관 등을 복지태도로 지칭하기도 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 가치관 모두를 포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허수연 외, 2016).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 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의 확대,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를 위한

담세 의사, 보편주의에 대한 선호도,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경제효율성 등 다양한 변인이 복지태도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설정되어 왔다(김희자, 2013). 이러한 복지태도 측정의 다양성은 복지라는 개념과 영역의 광범위 함과 개별 복지영역에 관련된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독특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허수연 외, 2019).

뿐만 아니라 복지태도는 복지정책의 영역 혹은 차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해 및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복지태도의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Goerres&Prinzen, 2011). 선행연구들은 복지태도의 차원을 크게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복지국가의 구체적 설정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개별 사회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나누고 있다(이민호, 2021). 복지국가의 구체적 설정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 성장과 분배 가운데의 선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노대명 외, 2011).

2.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복지태도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된 연구문제로 주목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미시적으로 개인적 이해(self-interest)나 가치 태도(values) 등의 개인 특성이, 거시적으로 제도적 특성 및 거시경제적 상황 등이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형관 외, 2019).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Jæger, 2006). 먼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의 객관적 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결정된다고 보는 자기이해(self-interest)의 관점이 있다. 즉, 복지와 관련한 사람들의 이해의 차이가 복지 이슈 나아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김영순・여유진, 2015). 이러한 자기이해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계급적 지위 및 복지 지위도 포함될 수 있다.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를 통해 계급에 따

라 복지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Korpi, 1983). 권력자원론에 따르면 노동계급이 자본계급보다 복지책임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지지한다(Svallfors, 1997). 또한 복지지위론은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 세 가지 지위의 차원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결합을 통해 복지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안상훈, 2009).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복지를 경험할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 기여금에 대한 부담이 낮을수록, 복지공급을 담당하는 사회문화전문가가 보다 급진적일수록 복지국가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이민아 외, 2021).

다른 유형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정치이념, 가치관, 신뢰 등을 복지태도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김길홍 외, 2022).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치이념 성향이 주요한 영향을 끼치며, 곧 진보적 이념(보수적 이념)일수록 친복지(반복지) 태도를 지님을 확인하고 있다(Bean & Papadakis, 1998; Edlund, 1999; Gelissen, 2000; Jager, 2008).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도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및 증세에 대해 더 지지적임을 확인하고 있다(김신영, 2010). 복지태도 결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정책집행이 얼마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손병돈, 2016). 실증연구 결과 사적 신뢰, 공적 신뢰가 높을수록 친복지적이었으며(조정하 외, 2018),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의 부패수준이 낮고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지호 외, 2016).

한편, 선행연구들은 또한 복지태도 결정에는 국가수준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제도적 특성 등이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형관, 2019). 선행연구들은 1인당 GDP,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불평등 지수 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복지태도 결정에의 거시적 맥락을 파악하고 있다.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클수록 적극적인 복지태도를 보인다는 실증연구가 존재하며(김형관, 2019; Fraile & Ferrer, 2005), GDP의 경우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Jaime-Castillo et a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 및 집단의 복지태도가 개인 특성 및 가치태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있음을 환기한다.

3. 복지태도와 복지수혜성 간의 관계

복지태도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 중 자기이해(self-interest)의 관점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계급적 지위 및 복지 지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복지수혜성(welfare clientele)'을 강조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은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집단과 수혜를 받지 않는 집단을 구분하고, 수혜집단이 복지정책을 더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김사현, 2012).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할 것으로 보는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복지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그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보다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김사현, 2012).

또한 복지수혜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맺어지는 이해관계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수혜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라는 세 가지 지위로 정리할 수 있다(안상훈, 2000). 현재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큰 이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들로서 복지수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이민호, 2017). 반대로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는 이들은 복지납세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감소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민호, 2017). 이러한 복지지위는 사회정책 또는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복지제도의 수혜여부가 정책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김사현, 2012). 공공복지의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개인 또는 집단은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나 축소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복지태도를 형성하게 된다(안상훈, 2009; 주은선·백정미, 2007; Kangas, 1997).

이처럼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복지수혜성을 강조하는 이론은 개인 간의 복지태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종류에 따라 수급의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이론적 경험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별로 수급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의 양상도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 한 사회의 복지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김사현, 2012).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 예컨대 재분배(소득격차해소)와 같은 정책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특히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복지정책의 일반적 목적을 수급지 위와 연결 짓고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노대명 외, 2011).

일반적으로 제도주의 이론은 복지수급의 지위를 가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국가 혹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안상훈, 2000; Pierson, 1996; Svallfors, 1997). 이는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이 개인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연구들의 경우 복지제도 수급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복지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주은선·백정미, 2007), 여전히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연구들도 존재한다(김영순·여유진, 2008; 김사현·홍경준, 2010; 손병돈, 2016).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이 복지지위 혹은 공공복지 경험 여부가 복지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다(류진석, 2004; 주은선·백정미, 2007; 이아름 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에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복지태도 분석에 있어 복지관련 지위가 유용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허수연 외, 2016).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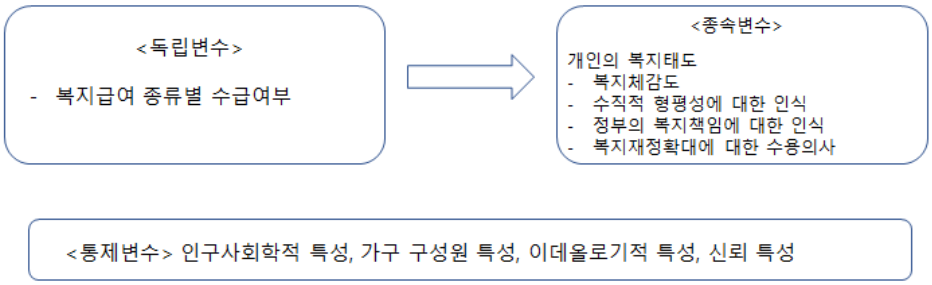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급여 수급은 복지태도의 주요 영향요인인 '복지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복지급여 수급이 그 정도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지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5개년 자료를 통하여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문제

구분	내용
연구문제 1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 여부는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앞서 세운 연구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 < 그림 1>과 같다. 해당 분석틀을 통하여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에 따른 개인의 복지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성별, 교육수준, 연령 등의 개인 특성 및 지역, 소득 등의 가구 특성, 개인이 지닌 가치관 및 정치성향과 같은 이념적 특성은 모두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된다.

<그림 1> 연구 모형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논의의 분석틀로 수립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가설은 복지태도를 자기이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복지수급지위 여부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을 근거로, 수급의 경우 비수급의 경우보다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즉,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체감도가 높고,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복지재정부담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 연구가설의 설정

가설1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2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받은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3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현재 소득격차가 더 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설4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향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설5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소득격차 해소에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가설6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바람직한 복지수혜범위를 더 넓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7	복지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재정지출의 확대를 더 지지할 것이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설정 및 데이터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3년째 광범위한 패널조사를 실시해 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 혹은 종단 자료란 여러 개체들을 복수의 시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함으로써 얻는 데이터를 말한다(한치록, 2019).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이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 영역과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조사”로 나뉜다. 가구원은 조사 대상년도에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혈연관계의 친족으로 정의하며, 만 15세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복지태도를 주로 복지패널 부가인식조사에서 측

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소득, 조세, 지출,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재정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재정패널의 조사는 1년마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실사 시점은 종합소득신고자 신고가 끝나는 5월부터 9월 말까지이다. 조사 성공 가구는 매년 4000명 이상이며 원표본 유지율도 70%이상이다. 따라서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 복지급여 수급 현황 및 전반적인 복지태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데이터 가운데 2016년도 9차조사자료부터 2020년도 13차조사자료 최근 5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9차조사 이후 자료부터 조세인식과 관련한 문항들이 신설되어 복지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조사연도 표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9~13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 및 가구원 수

조사차수	총 조사성공가구 수 (개)	조사성공 가구원 수 (명)	원표본 유지율 (%)
9차년도	4,832	7,809	76.8%
10차년도	4,790	7,865	75.2%
11차년도	4,770	7,965	73.8%
12차년도	4,765	8,010	72.6%
13차년도	4,762	14,759	71.1%

2. 종속변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가치, 인식,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복지와 관련한 개인적 가치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정도나 정부의 복지지출정도에 대한 의견을 의미한다(Taylor-Gooby, 1985). <표 4>에 따르면 복지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상

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복지체감도 2)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3)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4)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로 정의하고, 해당 변수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복지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복지 체감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에 비해 느끼는 만족도 및 효용을 의미한다. 재정패널 9차 ~ 13차 가구원설문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수준', '현재 우리나라 세금 부담 및 복지수준' 항목을 통하여 측정한다.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동 설문에 있는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격차', '우리나라 향후 계층 간 소득격차'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해당 변수는 '매우 크다'부터 '매우 크지 않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복지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연구자	복지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민아(2021)	복지정책 평가,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 성장vs분배
이민호(2021)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 선별적복지vs보편적복지,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 개별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김형관(2019)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금종예 외(2017)	복지확대 지지 정도, 증세를 수반한 복지확대 지지 정도
최고은(2016)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
정세희(2015)	복지재정지출 확대 지지도

다음으로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은 동 설문에 있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것(정책vs노력)',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것(정책vs노력)'은 정부정책부터 개인노력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며, 역코딩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 책임을 크게 인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측

정한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는 '복지 수준 확대 위한 증세시, 추가 부담 의향'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는 '부담 의향 없음'부터 '현재 세금의 15% 부담 의향'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5> 종속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설문항목
종속 변수	복지 체감도	-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 수준과 복지수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 귀하는 우리나라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큰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 귀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	-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귀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재정지출 중에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복지급여 및 육아출산 관련 지원금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단위 설문에 있는 문항의 '정부지원현금'과 가구 단위 설문에 있는 문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자녀양육지원금', '정부지원현물'의 수급여부와 수급정도를 측정한다. 수급정도는 연간 총 수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정패널의 복지현황에서 측정하는 정부지원 복지급여의 경우 지원하는 지원하는 단위에 따라 가

구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가구 대상 설문에서,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가구원 대상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표 6> 독립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설문 유형	설문항목
독립 변수	정부지원현금	가구원 대상 설문	- 작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정부지원 현금 소득이 있으셨습니까? - 정부지원 현금 소득의 유형은 무엇이며,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국민기초 생활 보장급여	가구 대상 설문	- 귀 가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형, 수급액)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작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에 함께 사셨던 가족 분 중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양육(출산) 및 교육지원금		- 작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에서 자녀양육(출산) 또는 교육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직접지원받은 금액 외에 공제 또는 보조 받은 금액,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받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 받은 가구원은 누구이며, 유형별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수급액과 연간수급 총액을 각각 기입해 주세요.
	정부현물지원		- 작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정부지원 현물(상품권(교환권, 바우처 등), 식료품, 기타재화 등)을 제공받으셨습니까? 단, 앞서 응답한 자녀 양육 관련 바우처 등은 제외하고 응답합니다.

가구원 단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현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기타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농어업정부 보조금은 농어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경증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제도로 중복수급은 불가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리가 상실된다. 보훈수당은 공훈을 세웠

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마련해주는 일련의 보상제도로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가구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뉘는데, 일반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는 가구원 단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현금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가구원이 직접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구주 등이 대신해서 응답하고 가구 단위 지급으로 처리되었다. 자녀양육지원금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보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출산축하금, 다자녀지원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현물지원은 바우처, 식료품, 기타재화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물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기타 현물 지원 내역에는 자녀양육지원금에서 응답한 바우처 등은 제외된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크게 1)인구사회학적 특성 2)가구구성원 특성 3)이데올로기적 특성 4)신뢰 특성으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위 변수들은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독립변수로 다수 사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지급여수급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해당 변수들을 통제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이 포함된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가족보호의 부담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Svallfors, 1995), 여성의 고용증가는

주로 공공부문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Sainsbury, 1996; 안상훈, 2000) 남성보다 복지친화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한다. 응답자의 연령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있지만 복지태도와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Van Oorschot, 2000; Blekesaune & Quadangno, 2003) 응답자의 연령은 조사시점(2020년)에서 출생년도를 차감하여 구한다. 교육수준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지위 역시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바(Derks, 2005),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안받았음'부터 '박사 졸업'까지 8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건강수준은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의료 혜택을 포함한 복지제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 친화적 태도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가구구성원 특성에는 소속 가구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소득수준을 포함하였다. 각 개인은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집단에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Lipsmeyer & Nordstrom, 2003).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정치성향 및 복지 관련 가치관을 포괄한다.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평등한 분배정의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반면(Craig et al., 2006),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우파적 이념, 즉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반대하는 경향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Rudolph & Evans, 2005). 오늘날 여러 민주사회에서 계급균열의 위상은 약화됐지만, 이러한 이념과 가치의 대립은 정치적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Dalton, 2010).

<표 7> 통제변수의 측정

구분	특성	요소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가구 구성원 특성	지역, 소득수준
	이데올로기적 특성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정치적 성향
	신뢰 특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뢰

5. 변수의 요약

<표 8>은 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변수명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의 경우 복지정책 수준, 납부 대비 혜택 수준, 현재 소득격차 수준, 향후 소득격차 수준,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원데이터에서 역코딩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복지급여의 유형별로 수급은 1, 비수급은 0으로 코딩하였다. 통제변수 중 건강수준, 정치성향,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인에 대한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수행하였다.

<표 8> 변수의 속성

유형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복지체감 정도	복지정책 수준	1=현재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2=적당하다 3=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납부 대비 혜택 수준	1=매우 낮은 수준이다 2=약간 낮은 수준이다 3=적절한 수준이다 4=약간 높은 수준이다 5=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현재 소득격차 수준	1=전혀 크지 않다 2=별로 크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크다 5=매우 크다
		향후 소득격차 수준	1=매우 작아질 것이다 2=약간 작아질 것이다 3=보통이다 4=약간 커질

			것이다 5=매우 커질 것이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1= 개인노력 5= 정책
		복지수혜범위	1=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2=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제공 3=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
	복지 증세부담 수용의사	복지재정부담 태도	1=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2= 현재 세금의 5% 미만 3=5-10% 4= 10-15% 5=15%이상
독립변수	수급 여부	사회보험 및 보조금	1= 수급 0= 비수급
		정부지원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현물지원	
		자녀양육지원금	
		출산관련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	2020년 응답 시점 기준 연령
		교육수준	1=안받았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4년제미만) 6=대학교(4년제 이상) 7=대학원 석사 8=대학원 박사
		건강수준	1=매우건강 2=대체로 건강 3=보통 4=대체로 건강하지 못함 5=매우 건강하지 못함
	환경 요인	지역	비수도권=0 수도권=1
		소득수준	월평균 총 경상소득
	이데올로기적 요인	정치성향	1=매우 진보 2=다소 진보 3=중도 4=다소 보수 5=매우 보수
		정치에 대한 관심	1=매우 많다 2=다소 많다 3=보통이다

			4=다소 적다 5=매우 적다
	신뢰 요인	정치인에 대한 신뢰	1=매우 신뢰할 수 있다 2=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3=보통이다 4=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5=매우 신뢰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	1=매우 신뢰할 수 있다 2=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3=보통이다 4=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5=매우 신뢰할 수 없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모형에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패널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추정모델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데이터의 이점은 관측불가능한 요인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으며 미시적 개체들의 동학을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있다(Baltagi, 2013; Hsiao, 2014; Frees, 2004). 따라서 패널데이터를 통하여 상이한 개체 간의 차이와 동일 개체 내의 변화를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모형은 통합최소제곱모형(Pooled OLS, POLS), 개인 임의효과모형(One Way Random Effects Model), 개인 고정효과모형(One Way Fixed Effects Model)으로, 모형검정을 통해 최적 모형을 선택하여 복지급여수급 여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것이다.

통합최소제곱모형(POLS)의 경우 모든 관측치가 독립 관계이며 동일 시점에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즉 해당 모형은 설명변수와 오차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시점들의 데이터를 통합(pool)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한 개체 내에서 종속변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에 걸쳐 연관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 t에서 개체들의 모집단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모집단 평균 모형

(population- averaged, PA)에 해당한다(한치록, 2017). 그러나 한 개체의 연속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이들의 오차항이 독립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자기상관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룹 간의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 때는 이를 고려하는 고정효과나 임의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통합최소제곱모형: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Z_{it} + u_{it}$

패널데이터의 분석에서는 정보를 얻을 비교의 차원이 개체일 수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개체 간' 비교로부터 도출되는 함수관계와 '개체 내' 비교로부터 도출되는 함수관계가 동일한 경우 임의효과 모형을, 상이한 경우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한치록, 2017).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설명변수들과 개별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효과 모형과 차이가 있다. 다만, 개인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경우 자유도 손실로 인한 추정량의 효율성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오재록 외, 2020).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할 경우 더미변수가 추가될 때 자유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유도를 분모로 갖는 표준오차의 경우 그 값이 커져 효율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에서 오차항은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s)와 고유오차(idiosyncratic errors)로 구분된다. 두 모형 모두 설명변수가 고유오차에 대하여 강외생적이라고 가정하지만 개별효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가정하고 있다. 임의효과모형은 관측되는 설명변수가 개별효과와 독립이며 개별효과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반면($Cov(x,\alpha_i)=0$), 고정효과모형은 설명변수가 개별효과와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하며($Cov(x,\alpha_i)\neq 0$), 개별효과가 통제될 때 설명변수의 차이로 인한 종속변수의 평균적인 차이를 정의한다.

고정 또는 임의효과 모형: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Z_{it} + \mu_i + \varepsilon_{it}$

통합최소제곱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중 상대적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F-test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F값이 유의한 값이 산출되면 고정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한편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중 상대적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Test를 수행하여야 한다. 테스트 결과 p-value가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Cov(x,α_i)=0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확률효과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패널데이터의 개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후 변수별로 종합적인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9 ~ 13차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패널데이터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5개 연도 조사에 모두 응답하여 각 차수별로 모든 관측치가 존재하는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모든 개체(i)에서 관측시점(t)이 동일한 균형 패널데이터(balanced data)이다. 또한 변수마다 '무응답' 혹은 '해당없음'에 답한 관측치가 일정치 않았으므로, 납세자의식조사 파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 관측치 수는 5개년 총 28,590개이다.

1. 연도별 기초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9>와 <표 10 ~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도별 기초통계량과 변수별 기초통계량이 있다. 먼저 연도별 기초통계량은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은 연속형 변수로 분류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남자=0, 여자=1로 코딩되었으므로 평균값은 여성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별의 평균값인 0.44는 조사 대상자의 44%가 여성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0 수도권=1로 코딩되었으므로, 평균값인 0.40은 조사 대상자의 40%가 수도권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복지급여 수급 여부의 경우 수급=1, 비수급=0으로 코딩되었으

므로 평균값은 전체 응답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다.

<표 9>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초통계

변수		2016		2017		20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복지정책 수준	1.77	0.63	1.78	0.58	1.85	0.56
	납부 대비 혜택 수준	2.57	0.84	2.63	0.82	2.67	0.84
	현재 소득격차 수준	4.26	0.69	4.26	0.66	4.24	0.65
	향후 소득격차 수준	4.28	0.67	4.23	0.69	4.28	0.67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3.94	0.89	3.87	0.96	3.94	0.93
	복지수혜범위	2.00	0.66	2.05	0.68	2.01	0.68
	복지재정부담 태도	1.42	0.62	1.48	0.65	1.41	0.59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0.12	0.32	0.13	0.34	0.14	0.35
	정부지원현금	0.16	0.37	0.17	0.38	0.18	0.3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2	0.14	0.02	0.15	0.02	0.14
	기타현물지원	0.01	0.07	0.01	0.07	0.01	0.09
	자녀양육지원금	0.11	0.31	0.12	0.33	0.11	0.31
	출산관련지원금	0.01	0.12	0.02	0.12	0.01	0.1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01	0.12	0.01	0.12	0.02	0.13
통제변수	성별	0.44	0.50	0.44	0.50	0.44	0.50
	연령	56.47	14.67	56.47	14.67	56.47	14.67
	교육수준	4.45	1.52	4.45	1.52	4.45	1.53
	건강수준	3.67	0.89	3.65	0.90	3.70	0.90
	지역	0.40	0.49	0.40	0.49	0.40	0.49
	소득수준	435.08	305.46	435.14	326.42	473.35	405.25
	정치성향	2.86	0.87	2.95	0.95	2.96	0.92
	정치에 대한 관심	2.97	0.94	3.15	0.98	3.13	0.94
	정치인에 대한 신뢰	2.16	0.83	2.25	0.80	2.25	0.84
	공무원에 대한 신뢰	2.80	0.92	2.66	0.91	2.70	0.92

변수		2019		202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복지정책 수준	1.93	0.59	1.94	0.56
	납부 대비 혜택 수준	2.53	0.81	2.60	0.82
	현재 소득격차 수준	4.21	0.68	4.23	0.66
	향후 소득격차 수준	4.23	0.70	4.31	0.66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3.85	0.84	3.86	0.89
	복지수혜범위	2.00	0.66	1.95	0.64
	복지재정부담 태도	1.39	0.58	1.45	0.60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0.15	0.36	0.16	0.37
	정부지원현금	0.19	0.39	0.20	0.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2	0.15	0.02	0.14
	기타현물지원	0.01	0.08	0.01	0.08
	자녀양육지원금	0.09	0.29	0.10	0.30
	출산관련지원금	0.01	0.10	0.01	0.10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02	0.14	0.01	0.12
통제변수	성별	0.44	0.50	0.44	0.50
	연령	56.47	14.67	56.47	14.67
	교육수준	4.46	1.53	4.46	1.53
	건강수준	3.57	0.90	3.58	0.93
	지역	0.40	0.49	0.40	0.49
	소득수준	480.79	345.67	465.31	348.21
	정치성향	2.89	0.91	2.87	0.95
	정치에 대한 관심	3.01	0.92	3.08	0.94
	정치인에 대한 신뢰	2.00	0.79	2.07	0.83
	공무원에 대한 신뢰	2.47	0.92	2.49	0.92

2. 종속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총 7가지로, 각 문항은 3점 혹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변수별 기초통계량의 경우 표준편차를 전반적(overall), 개체 간(between), 개체 내(within) 변동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overall 통계량은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계산된 기초통계량이고, between 통계량은 집단 간 표준편차, within 통계량은 집단 내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납부 대비 혜택 수준을 제외한 종속변수는 개체 내 표준편차(within SD)가 개체 간 표준편차(between SD)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 변수들의 산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 가구원 내에서의 변화가 상이한 개인 간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보다 큼을 의미한다. 반면, 납부 대비 혜택수준의 경우에는 가구원 내 표준편차보다 가구원 간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10> 종속변수 기초통계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복지정책 수준	1.85	overall	0.59	1	3
		between	0.38		
		within	0.45		
납부 대비 혜택 수준	2.60	overall	0.83	1	5
		between	0.59		
		within	0.58		
현재 소득격차 수준	4.24	overall	0.67	1	5
		between	0.45		
		within	0.50		
향후 소득격차 수준	4.27	overall	0.68	1	5
		between	0.44		
		within	0.52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3.89	overall	0.90	1	5
		between	0.58		
		within	0.70		
복지수혜범위	2.00	overall	0.66	1	3
		between	0.40		
		within	0.53		
복지재정부담 태도	1.43	overall	0.61	1	5
		between	0.41		
		within	0.45		

3.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총 7가지의 복지급여로, 각 문항은 수급 여부에 따라 수급=1, 비수급=0으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 기초통계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를 overall, between, within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기타현물지원, 출산관련지원금의 경우 집단 간 표준편차보다 집단 내 표준편차의 수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변수들의 산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집단 내 변화에서 더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개체 내 표준편차보다 개체 간 표준편차의 수치가 큰 것은 해당 변수의 산포가 개체 간 차이에서 더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표 11> 독립변수 기초통계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사회보험 및 보조금	0.142	overall	0.35	0	1
		between	0.32		
		within	0.13		
정부지원현금	0.182	overall	0.39	0	1
		between	0.37		
		within	0.1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22	overall	0.15	0	1
		between	0.13		
		within	0.06		
기타현물지원	0.006	overall	0.08	0	1
		between	0.05		
		within	0.06		
자녀양육지원금	0.106	overall	0.31	0	1
		between	0.26		
		within	0.17		
출산관련지원금	0.012	overall	0.11	0	1
		between	0.05		
		within	0.10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016	overall	0.13	0	1
		between	0.09		
		within	0.09		

<표 12>는 각 복지급여 별로 성별, 연령, 지역, 건강수준, 소득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해당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결과의 해석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평균연령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급여 수급자가 고령층인 반면, 자녀양육지원금 및 출산관련지원금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교육수준과 평균소득 또한 자녀양육지원금과 출산관련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다른 유형의 복지급여 수급자에 비해 고학력, 고소득이었다. 이를 통해 복지급여 유형별 수급 집단의 특성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복지급여별 수급자 특성

	인원(명)	평균 연령	평균 교육 수준	평균 소득	여성 비율	건강 수준
사회보험 및 보조금	4046	71.42	3.47	289.19	37	3.19
정부지원현금	5197	76.35	2.64	186.14	56	2.7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22	69.73	2.77	121.85	63	2.52
기타현물지원	176	64.59	3.20	199.63	64	2.62
자녀양육지원금	3042	42.76	5.25	500.23	34	3.97
출산관련지원금	347	38.52	5.52	487.54	38	4.03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464	69.75	3.57	317.56	50	3.00

4. 통제변수

통제변수의 경우 5년간 변화가 없는 변수(time invariant variable)를 제외하고 표준편차를 overall, between, within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6.47세로 최소 연령은 23세, 최대 연령은 106세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응답 시점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39%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수준의 평균은 2점 '대체로 건강'과 3점 '보통' 수준의 중간인 2.37점, 소득 수준 평균은 457.9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3> 통제변수 기초통계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성별	0.44	0.50		0	1
연령	56.47	14.67		23	106
교육수준	4.45	1.53		1	8
지역	0.40	0.49		0	1
건강수준	2.37	overall	0.91	1	5
		between	0.73		
		within	0.54		
소득수준	457.93	overall	348.31	0	9000
		between	304.70		
		within	168.79		
정치성향	2.91	overall	0.92	1	5
		between	0.67		
		within	0.63		
정치에 대한 관심	3.07	overall	0.95	1	5
		between	0.67		
		within	0.67		
정치인에 대한 신뢰	3.85	overall	0.82	1	5
		between	0.55		
		within	0.61		
공무원에 대한 신뢰	3.38	overall	0.93	1	5
		between	0.64		
		within	0.68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패널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이란 변수들 간 선형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김태근, 2020).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 관계의 강도를 의미할 뿐,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길곤, 2017). 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이하 패널분석의 결과에서 논의한다.

더불어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1차적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도 검사해보기로 한다.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크다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민, 2021). 회귀분석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Ceteris Paribus)'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만약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다면 한 설명변수의 변화가 다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라는 가정이 충족되지 못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박정민, 2021). 이는 추정량의 효율성을 낮출 수가 있으므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추정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평균 VIF 값은 1.41로 강건한 다중공선성 기준인 6보다 작은 수치가 나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는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이다. 독립변수 X_i에 대해 다른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에 적합시켰을 때의 R-Square 값을 R_j^2라고 할 때, 허용도는 TOL=1-R_j^2으로 정의되며, 분산팽창계수(VIF)는 허용도의 역수로 정의된다(고길곤, 2017).

<표 14>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ariable	VIF	Tol
사회보험 및 보조금	1.24	0.81
정부지원현금	1.98	0.5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8	0.85
기타현물지원	1.11	0.90
자녀양육지원금	1.24	0.81
출산관련지원금	1.12	0.89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1.03	0.97
성별	1.15	0.87
연령	2.69	0.37
교육수준	2.04	0.49
건강수준	1.41	0.71
지역	1.06	0.94
소득수준	1.3	0.77
정치성향	1.23	0.81
정치에 대한 관심	1.15	0.87
정치인에 대한 신뢰	1.55	0.65
공무원에 대한 신뢰	1.54	0.65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 복지정책 수준은 종속변수 '납부대비 혜택수준'과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대로 '납부대비 혜택수준'은 출산관련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하나의 차원에 속한 변수들이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의 방향 및 유의성이 엇갈려 나타난다는 것은, 특정 차원에만 주목할 경우 복지태도에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게 됨을 시사한다. 이외 종속변수들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모두 보였다.

<표 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복지정책 수준	1.000													
2	납부 대비 혜택 수준	0.011	1.000												
3	현재 소득격차 수준	-0.079	-0.164	1.000											
4	향후 소득격차 수준	-0.049	-0.176	0.632	1.000										
5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0.074	0.136	0.324	0.361	1.000									
6	복지수혜범위	-0.021	-0.080	0.080	0.088	0.080	1.000								
7	복지재정부담 태도	-0.168	-0.046	0.073	0.051	0.029	0.022	1.000							
8	사회보험 및 보조금	0.066	0.068	0.010	0.000	0.003	0.006	-0.083	1.000						
9	정부지원현금	-0.010	0.193	-0.008	-0.018	0.028	0.046	-0.173	0.265	1.000					
1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0.038	0.107	-0.014	-0.013	0.016	0.046	-0.067	-0.067	0.209	1.000				
11	기타현물지원	-0.015	0.051	0.003	-0.008	-0.004	0.020	-0.020	-0.018	0.073	0.310	1.000			
12	자녀양육지원금	-0.066	0.001	0.022	0.024	-0.004	-0.012	0.082	-0.120	-0.137	-0.027	0.016	1.000		
13	출산관련지원금	-0.026	-0.006	0.001	0.000	-0.012	-0.002	0.039	-0.039	-0.047	-0.017	0.008	0.321	1.000	
14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	0.005	0.028	0.004	-0.005	-0.014	0.020	-0.035	0.010	0.105	0.112	0.085	-0.033	-0.012	1.000

	p<.1		p<.05		p<.01

*연속형 변수 간 Pearson Correlation, 연속형·이분형 변수 간 Point Biserial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함

제 3 절 패널회귀분석

5년간 재정패널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데이터를 통해 각종 복지급여 수급여부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모형의 적합도(model fit)를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회귀모형의 설명도,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며,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의 F-통계량을 이용하여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평가하는 방법,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길곤, 2017).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적합성 평가는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을 활용한 회귀모형의 적합성 평가이다. 종속변수의 변동을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모형의 적합도는 오차변동 대비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분산분석의 검정통계량은 F-분포를 따르며, F-통계량은 회귀모형의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게 된다(고길곤, 2017). 본 연구에서 검정한 모형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통합최소제곱모형에 대한 F-검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유의수준 1%하에서 '고정효과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 간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어떤 것이 패널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델인지 판단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 Hausman test 검정 또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수준 1%하에서 Cov(x,α_i)=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으로 개인 고정효과 모형이 채택되었다.

또한 패널데이터의 경우, 집단 내의 응결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동분산 가정을 유지하면 결과의 왜곡을 야기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오차를 강건하게 넓혀 표준화시킨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1. 복지체감도

<표 16>는 복지급여 수급여부가 복지체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패널 분석모형의 결과표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의 수준과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복지정책 수준과 관련하여 유의수준 5% 하에서 1개의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0% 하에서는 4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보험 및 보조금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0.038점 증가하였다($p<0.1$). 정부지원현금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0.064점이($p<0.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 0.051점이 증가하였다($p<0.05$). 흥미로운 부분은 출산관련지원금의 경우 해당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0.06점 감소한다는 것이다($p<0.1$).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혜택 수준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유의수준 1% 하에서 1개의 독립변수, 5% 하에서 2개의 독립변수, 10% 하에서 3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부지원현금을 수급하는 경우 비수급의 경우에 비하여 본인 납부 대비 체감 혜택 수준이 0.116점($p<0.05$), 자녀양육지원금의 경우 0.088점 증가하였다($p<0.01$). 흥미로운 점은 복지정책 수준과 마찬가지로, 출산관련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혜택 수준이 0.045점 감소한다는 것이다($p<0.1$).

<표 16> 복지체감도 분석 결과

		복지정책 수준		납부 대비 혜택 수준	
		b	se	b	se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0.038*	0.0132	0.027	0.0235
	정부지원현금	0.064*	0.0200	0.116**	0.016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37	0.0184	0.005	0.0324
	기타현물지원	0.014	0.0223	-0.042	0.0253
	자녀양육지원금	-0.018	0.0116	0.088***	0.0069
	출산관련지원금	-0.060*	0.0175	-0.045*	0.0158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051***	0.0048	0.015	0.0255
통제변수	성별	0	(omitted)	0	(omitted)
	연령	0.031***	0.0010	0.036***	0.0025
	교육수준	0.034*	0.0094	0.013	0.0114
	건강수준	0.012*	0.0035	0.035**	0.0060
	지역	-0.078	0.0320	0.029	0.0479
	소득수준	0	0.0000	0.000*	0.0000
	정치성향	-0.015**	0.0020	0.025*	0.0079
	정치에 대한 관심	0	0.0032	0.020***	0.0016
	정치인에 대한 신뢰	-0.014	0.0068	0.093***	0.0081
	공무원에 대한 신뢰	-0.011	0.0049	-0.012	0.0070
Number of Obs		28590			
Number of groups		5718			
F Value		2.57		3.19	
Prob > F		<.0001		<.0001	
R-squared		0.4107		0.6407	
Root MSE		0.5055		0.5189	
Hausman test		216.49***		488.87***	

*** p<0.01, ** p<0.05, *p<0.1

2.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표 17>는 복지급여 수급여부가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패널 분석모형의 결과표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인식하는 현재 소득격차 수준과 향후 소득격차 수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소득격차 수준과 관련하여 유의수준 10% 하에서 1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현재 소득격차 수준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0.059점 감소하였다(p<0.1).

향후 소득격차 수준과 관련하여 유의수준 10% 하에서 1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비수급의 경우에 비하여 향후 소득격차 수준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0.072점 증가하였다(p<0.1).

<표 17>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현재 소득격차 수준		향후 소득격차 수준	
		b	se	b	se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0.011	0.0209	-0.001	0.0283
	정부지원현금	-0.023	0.0115	0.023	0.022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33	0.0260	0.072*	0.0236
	기타현물지원	0.04	0.0435	0.025	0.0512
	자녀양육지원금	-0.002	0.0186	-0.017	0.0151
	출산관련지원금	-0.012	0.0154	-0.019	0.0159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059*	0.0196	-0.069	0.0268
통제변수	성별	0	(omitted)	0	(omitted)
	연령	0.077***	0.0006	0.078***	0.0013
	교육수준	-0.002	0.0159	0.001	0.0172
	건강수준	-0.003	0.0061	-0.002	0.0030

	지역	0.04	0.0270	0.046	0.0484
	소득수준	-0.000**	0.0000	-0.000*	0.0000
	정치성향	0.002	0.0037	-0.007	0.0057
	정치에 대한 관심	-0.004	0.0097	0.008	0.0070
	정치인에 대한 신뢰	-0.043*	0.0098	-0.058**	0.0071
	공무원에 대한 신뢰	0.002	0.0049	-0.006	0.0087
Number of Obs		28590			
Number of groups		5718			
F Value		2.83		2.53	
Prob > F		<.0001		<.0001	
R-squared		0.4489		0.4265	
Root MSE		0.5545		0.5752	
Hausman test		589.96***		484.42***	

*** p<0.01, ** p<0.05, *p<0.1

3. 정부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표 18>는 복지급여 수급여부가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패널 분석모형의 결과표이다. 구체적으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하여 정부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수혜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의수준 1% 하에서 1개의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0% 하에서는 3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해당 문항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간 응답자가 부여한 가중치를 통하여 측정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즉 소득격차 해소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0.093점 증가하였다(p<0.1). 출산관련지원금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0.083점이

(p<0.0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 0.131점이 감소하였다(p<0.1). 복지수혜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8> 정부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복지수혜범위	
		b	se	b	se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0.013	0.0112	-0.007	0.0203
	정부지원현금	-0.014	0.0409	0.044	0.02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93*	0.0269	-0.016	0.0192
	기타현물지원	-0.023	0.0682	0.08	0.0444
	자녀양육지원금	-0.022	0.0161	-0.004	0.0144
	출산관련지원금	-0.083***	0.0074	0.004	0.0082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131*	0.0299	0.016	0.0192
통제변수	성별	0	(omitted)	0	(omitted)
	연령	0.074***	0.0009	0.035***	0.0011
	교육수준	0	0.0181	-0.02	0.0163
	건강수준	-0.026*	0.0058	0.016	0.0106
	지역	0.128	0.0493	-0.061	0.0970
	소득수준	0	0.0000	0	0.0000
	정치성향	-0.020*	0.0054	-0.002	0.0024
	정치에 대한 관심	0.029*	0.0081	0.015*	0.0046
	정치인에 대한 신뢰	-0.067**	0.0102	-0.019**	0.0030
	공무원에 대한 신뢰	-0.028	0.0179	0.02	0.0118
Number of Obs		28590			
Number of groups		5718			
F Value		2.47		2.21	
Prob > F		<.0001		<.0001	
R-squared		0.4118		0.3715	
Root MSE		0.7744		0.5873	
Hausman test		456.52***		155.44***	

*** p<0.01, ** p<0.05, *p<0.1

4. 복지증세부담 수용의사

<표 19>는 복지급여 복지 관련 증세부담 수용의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패널 분석모형의 결과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수준 5% 하에서 1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수용의사가 0.052점 감소하였다(p<0.05).

<표 19> 복지재정부담 태도 분석 결과

		복지재정부담 태도	
		b	se
독립변수	사회보험 및 보조금	-0.056	0.0318939
	정부지원현금	-0.018	0.011136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0.022	0.0249507
	기타현물지원	-0.018	0.01251
	자녀양육지원금	0.018	0.0210379
	출산관련지원금	0.027	0.0524967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053**	0.0107283
통제변수	성별	0	(omitted)
	연령	0.021***	0.0010103
	교육수준	0.001	0.0068689
	건강수준	0.009	0.0035286
	지역	0.038	0.0528596
	소득수준	0	0.0000128
	정치성향	0.024	0.0097829
	정치에 대한 관심	0.031**	0.0048139
	정치인에 대한 신뢰	0.022*	0.0072154
	공무원에 대한 신뢰	0.003	0.0062002
Number of Obs		28590	
Number of groups		5718	

F Value	2.21
Prob > F	<.0001
R-squared	0.3715
Root MSE	0.5873
Hausman test	155.44***

*** p<0.01, ** p<0.05, *p<0.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복지급여 수급 여부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복지급여 7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대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모형1은 종속변수가 복지정책 수준, 모형2는 납부 대비 혜택 수준, 모형3은 현재 소득격차 수준, 모형4는 향후 소득격차 수준, 모형5는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책임 정도, 모형6는 복지수혜범위, 모형7은 복지재정부담 태도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되었다.

분석 결과 수급하는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다. 먼저 사회보험 및 보조금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정부지원현금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혜택이 충분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소득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득격차에 대해 정부의 정책 책임이 개인의 노력보다 크다고 생각하였다. 기타현물지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복지태도의 하위차원에 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자녀양육지원금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출산관련지원금은 앞선 복지급여와 달리 상반되는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혜택이 충분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오히려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소득격차해소에 정부의 책임보

다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에도 출산관련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소득격차해소에 정부의 책임보다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사회보험 및 보조금, 정부지원현금과 같이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 모형3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격차 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적었다.

<표 20> 패널분석 결과 요약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사회보험 및 보조금	0.038*	0.027	0.011	-0.001	0.013	-0.007	-0.056
정부지원 현금	0.064*	0.116**	-0.023	0.023	-0.014	0.044	-0.018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0.037	0.005	0.033	0.072*	0.093*	-0.016	0.022
기타현물 지원	0.014	-0.042	0.04	0.025	-0.023	0.08	-0.018
자녀양육 지원금	-0.018	0.088***	-0.002	-0.017	-0.022	-0.004	0.018
출산관련 지원금	-0.060*	-0.045*	-0.012	-0.019	-0.083***	0.004	0.027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0.051***	0.015	-0.059*	-0.069	-0.131*	0.016	-0.053**

*** p<0.01, ** p<0.05, *p<0.1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출산관련지원금의 경우, 수급에 따른 복지태도 양상의 방향성이 타 급여의 경우와 반대 방향이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및 보조금, 정부지원현금,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양(+)의 방향이었으나 출산관련지원금은 음(-)의 방향이었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대비 복지혜택을 인식하는 정도 또한 타 복지급여와 반대되는 방향성을 보였다. 이는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복지급여와 출산관련 지원금이 상반되는 복지태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관련지원금이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정책 목적 및 대상집단이 다른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복지국가 축소 혹은 재편의 시기는 계급 정치로 대변되는 '구정치(old politics)'가 복지수혜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new politics)' 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안상훈, 2000; Pierson, 1996).

둘째, 복지에 대한 주요 인식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하위 개념을 설정하여 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네 가지 복지 이슈(보편주의,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성장과 분배의 선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각 이슈들이 지향하는 목적 및 가치와 사회적 효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복지태도의 균열요인을 형성할 수 있다(허수연 외, 2016). 따라서 복지수급의 지위 변화에 따라 복지태도가 변화되거나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주요 복지 이슈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 시점에서의 수급여부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5개년 연속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시점에 걸친 양자의 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었다. 계급지위와 달리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번의 수급 경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켰으면 수급지위가 변하여도 인식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사현, 2012). 또한 장기적인 수급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목적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고, 그것이 규범으로 내면화되면서 일반적인 인식도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제도 수급경험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목적과 관련된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개별 복지영역에 대한 복지태도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개별정책 및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는 복지태도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지표로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복지태도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총체적(holistic approach)인 것으로, 예컨대 재분배나 불평 등에 대한 정부역할 등과 같은 복지정책의 일반화된 목적들이며,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특수적(program-specific approach)인 것으로 개별 사회보장제도들의 고유한 목적에 대한 정책지지나 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김사현, 2010). 프로그램 특수적 복지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이해적 관계가 총체적 접근보다 다소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특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복지인식에 있어 수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측면이 있다(김사현, 2012).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복지태도에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정패널에서 개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가 부가인식조사로 수행되기는 하였지만 2018년 일회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속 5개년 패널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수급여부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수급 금

액 및 기간을 활용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복지태도 연구에 제도에 따른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기간은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수급기간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급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목적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고, 그것이 규범으로 내면화되면서 일반적인 인식이 변해가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수급 금액 또한 응답대상자를 단순히 수급, 비수급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정도에 따라 연속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이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다루는 복지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간을 모두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수급 여부에 한정하여 설정하였다.

참 고 문 헌

고길곤. (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고양: 문우사.

금종예, & 금현섭. (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1-29.

강상원, 여차민, & 이석환. (2016). 복지정책 만족의 인식요인 연구: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4), 627-653.

강혜규. (2008).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혁신. 보건복지포럼, 2008(1), 14-23.

고경환. (20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154, 1-8.

곽노선. (2014). 이전지출 및 정부지출의 장단기 경제적 효과.

권혁주, 김효정, & 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46(2), 161-184.

권혁진. (2010).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 1-20.

김교성, & 이재완. (2000).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68-92.

김기태, 김미곤, 최준영, 강예은, & 노법래. (2019).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I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길홍, & 김사현. (2022). 위험지위별 복지태도 차이에 대한 정치적 신뢰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3(4), 2049-2061.

김미곤, 김태완, 여유진, 정해식, 유진영, & 김성아. (2013). 국민행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방안: 복지체감도를 중심으로. In: 보건복지부.

김범, 조영민, & 고길곤. (2022). 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41-61.

김사현. (2010).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사회복지연구, 41(3), 213-239.

김사현. (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 (PSM) 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9-38.

김수완. (2011).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2), 251-278.
김승래, 전영준, & 임병인. (2012). 소득계층별 교육· 복지 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30(4), 123-156.
김승연, & 홍경준. (2011).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207-231.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Focusing on State's Responsibilities upon Public Agenda]. 조사연구, 11(1), 87-105.
김영순, & 여유진. (2015). 기획세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재정분담의 정치;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2), 85-115.
김영주. (2019).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8(2), 161-186.
김윤재. (2011). 노인복지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51, 101-123.
김윤태, & 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Welfare Attitude and Welfare Institution in Korea Public Support for Welfare Institutions]. 동향과 전망(90), 331-378.
김종구. (2009). 지방정부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적용. 한국지방재정논집, 14(1), 1-25.
김태근. (2020).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김현정, 이정은, & 노은영. (2015). Q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인식 유형화 연구 [The Subjective Welfare Perception Pattern of Korean: Q-Methodological Approach]. 사회복지연구, 46(4), 321-349.
김형관, & 이상록. (2019). 복지태도 결정에 거시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acroeconomic conditions on welfare attitudes in the Welfare St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elfare regimes]. 사회복지연구, 50(3), 261-297.
김형관, 이순아, & 이상록. (2017).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Dynamics of Welfare Attitudes Change

in Korea: Longitudinal Study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Change]. 사회복지연구, 48, 59-89.

김홍순, & 정명희. (2021). 거주지역별 복지태도에서의 정부의 역할평가에 관한 연구-노인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1(4), 1-9.

김효정. (2014). 공적 소득이전 정책의 정책대상별 규모와 효과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효정. (2015). 공적 소득 이전의 수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재고찰: 사회복지지출 (welfare expenditure) 과 사회적 조세지출 (social tax expenditure) 의 통합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9(4), 329-358.

김희자. (2013).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59-88.

남궁근. (1994).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991-1014.

노대명, & 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박미경, & 조민효. (2016).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137-164.

박선경, & 신진욱. (2021). 코로나 19 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153-189.

박승준. (2008).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10(3), 99-134.

박원석. (2005).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대한지리학회지, 40(1), 47-62.

박정민. (2021). 조직구조 인식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배화숙. (2021). 복지태도에 따른 군집의 성격 분석과 복지인식 제고 전략 [An Analysis of Clust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elfare Attitudes and Proposal of Strategies to enhance Welfare Perception].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327-354.

성명재, & 박기백. (2008). 조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

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1(1), 63-94.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보건사회연구, 36(4), 5-34.
신봉호. (2010). 정부지출 구조와 부패. 재정학연구, 3(1), 117-144.
신정섭. (2022).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8(1), 141-169.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여유진, & 김영순. (2015). 한국의 중간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9(4), 335-362.
원경혜, & 이상혁. (2015). 노인의 공적,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6), 3787-3796.
윤지웅, 김태영, & 김주경. (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135-157.
이미애, & 류은영. (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33-55.
이민아, & 신혜리. (2021). 복지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노인의 복지인식 변화 연구.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4(-), 33-52.
이민호. (2021). 한국 복지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Changes in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focused on determinant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social welfare]. 한국사회정책, 28(1), 103-131.
이승주, & 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이아름, & 김사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264.
이지호, & 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이창근. (2013).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별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8(2),

57-81.
이창근. (2019).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4(3), 51-72.
이한나, &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임상수. (2015). 정부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7(4), 43-70.
임상수. (2018). 정부지출의 국가 간 파급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20(2), 59-90.
장동호. (2007).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59(1), 329-351.
전규식, 정지수, & 유경원. (2016).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응용경제, 18(2), 125-165.
정세희, & 문영규. (2015).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4), 23-46.
조정하, & 김성한. (2018).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Welfare Attitudes-Focused on the Trust,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mmunication]. 사회복지정책, 45(1), 86-110.
주만수. (200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6(1), 139-164.
주은선, &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최고은. (2016).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125-150.
최성은. (2011). 이전지출의 사회후생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4(4), 117-144.
최성은. (2012). 복지재정의 효과적 운용방향. 보건복지포럼, 2012(7), 25-30.
최재녕. (2005).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451-474.
허수연, & 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사회보장연구, 32(3), 203-235.

허명순. (2003).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응. 한국행정학보, 37(2), 189-211.

황아란, & 서복경. (2012).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24(2), 465-486.

황재희, & 신진원. (2020). 재정분권이 주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4), 55-69.

한치록. (2019). 패널데이터 강의, 2 판, 박영사. Market Value of the Firm",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4(1), 1-23.

Bean, C., & Papadakis, E.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3), 211-236.

Dallinger, U. (2010). Public support for redistribution: what explains cross-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4), 333-349.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Fraile, M., & Ferrer, M. (2005).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public support for cuts in unemployment benefits spending across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Sociology*, 20(4), 459-481.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s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4), 285-300.

Goerres, A., & K. Prinzen. (2011). Can We Improve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A Constructive Critique of Survey Instruments with Evidence from Focus Groups. *Social Indicators Research (Online First)*, 1 - 20.

Gough, I., & Abu Sharkh, M. (2011). Financing welfare regimes: mapping heterogeneous revenue stru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3), 280-291.

Jaeger, T., & Levy, R. (2006). Speakers optimize information density through syntactic reductio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19.

Jaime-Castillo, A. M., Marqués-Perales, I., & Álvarez-Gálvez, J. (2016). The impact of social expenditure on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 1089-1108.

Kangas, O. E. (1997). Self-interest and the common good: The impact of norms, selfishness and context in social policy opinion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6(5), 475-494.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Musgrave, R. A.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Kogakusha Co.

Pierson, P. (1996). The path to European integration: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2), 123-163.

Rantanen, T., Pawlak, A., & Toikko, T. (2015). The significance of social welfare attitudes in young peopl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Taylor-Gooby, P. (1991). Welfare state regimes and welfare citizenship.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 93-105.

Abstract

The Effect of the Welfare Benefit on the Welfare Attitudes

Young Joo Byeon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s on the welfare attitudes of the policy target group.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data from round 9(2016) and round 13(2020) of the Panel i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re used, and the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all five consecutive years of the survey were targeted. Using the advantage of panel data,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various estimation models. As a result of F-test and Hausman test, Fixed Effect model was adopted.

Welfare attitude,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was largely defined as the degree of welfare experience, perception of vertical equity,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welfare responsibility, and willingness to accept increased welfare tax burde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pending on the type of welfare benefit received, the effect on welfare attitudes was differ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ildbirth-related subsidy, the direction of change in welfare attitudes

according to receipt was opposite to that of other benefi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benefit receipt and welfare attitude using data spanning several points in time.

Keywords : Welfare Attitude, Welfare Perception, Panel Analysis, Korea Public Finance Panel Study
Student Number : 2021-27300